산업 분산 없이 지방시대 없다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부 4대 전략 추진, 일자리가 균형발전 핵심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했습니다.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과 의료 공백 등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을 회생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협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 중입니다.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구하고, 교육자유·기회발전특구 추진을 논의 중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균형발전 계획은, 2004년 제1차 계획을 세운 뒤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이 침체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동화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기존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수도권의 산업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일자리를 보장할 산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큽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분산이 균형 발전의 요체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세제 등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자생기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수도권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도로 철도망 등 SOC 확충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조선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일하는 노인 577만 명…'그냥 노는'청년 50만 명

동아일보 오피니언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10년 새 2배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10년에는 300만 명 넘게 불어 갑절이 됐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한 데다 노후 생계를 위해 고용 전선에 뛰어드는 '일하는 노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지난달 20대 이하 청년(15~29세) 취업자는 12만5000명 급감해 2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보였다. 고령 취업자는 수십만 명씩 늘어나는 데 비해 청년층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 반도체 등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취업을 유예해서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이 많아진 탓이다. 일하는 청년보다 일하는 노인 보기가 쉬운 시대가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청년층이 5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취업·진학 준비나 군입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청년이 이만큼 된다는 얘기다. 국가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단기 임시직 같은 원치 않는 일자리에 내몰리다가 이마저 끊어지면서 구직 의욕을 잃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고용 환경은 고령층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4명 중 1명은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열악한 단기 일자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노인들이 일하는 것은 노후 빈곤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65세를 넘겨 일하는 10가구 중 1가구는 근로소득과 연금 등을 합쳐도 월 소득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한다.

노인 일자리든 청년 일자리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작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공공 일자리가 구명줄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공공 일자리=세금 축내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실업은 '일자리 미스매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청년들의 실업이 길어지면 고용시장에서 영영 퇴장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우려가 있다.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기업들의 매력도를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평생의 커리어'에서 긍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 | Fax. 033-249-5274

Copyright(c)2022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

참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정책 Letter

VOL.83
2023.04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 MZ세대의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과 감수성 고양해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
- 서점, 카페, 공방 등 슬리퍼 신고 문화누리는 '15분 문화슬세권' 1만 곳 조성 -
- 국립오페라 · 발레 · 합창단 등 예술단, 올해 101개 지역에서 순회공연 -
- 인구감소지역은 공모사업 가점 우대 및 정책특례 부여로 문화환경 우선 개선 -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3월 23일(목)에 발표했다.

□ 범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박보균 장관은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 주민의 문화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 박 장관은 "경제, 교육보다, 문화에 투자할 때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며,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 만들 3대 전략·11대 과제

□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순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정책비전을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제시하고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 문화예술관람률 : 대도시 60.7% > 읍·면 50.0%, ▲ 여가생활만족도 : 대도시 58.6% > 읍·면 49.4% ('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

□ 이를 실현할 3대 추진전략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이며, 11대 추진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 구석구석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

-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체 문화시설 수 뿐 아니라 국립 문화시설 수도 저조하여 문화향유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진주),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간다.
-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지속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4만 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동네마다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 '15분 문화슬세권' 조성

-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된다. 거제도는 지역 내 5개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여는 등 지역마다 문화생활의 지형이 확장될 예정이다.

* 슬세권 : 슬리퍼+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란 뜻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맞춤 정책지원으로 지역소멸 대응

-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신규 추진('23년 7개 지역)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에 달한다.

○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예술꽃 씨앗학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 ('23년 3개 지역 공모) 향후 이를 확대하여 정식 인정절차를 거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총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 프로듀서' 지원과,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인 (가칭)'지역문화 인재은행' 도입 등을 신규 추진하여 창의적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특허청

내가 쓰던 미등록 상표, 타인이 사용해 유명해졌다면?

- 특허청, 유명 상표에 대한 선사용자 보호 규정 마련 -

갑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ㄱ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완구를 판매해왔다.

어느 날 다른 사람 을이 우연히 갑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한 ㄱ를 자사 상표로 사용하여 완구를 판매하면서, TV광고 · 누리소통망(SNS) 홍보 등을 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완구 분야에서 국내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갑은 을로부터 ㄱ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3월 28일(화) 공포되어 9월 29일(금)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흥정민 의원 대표발의(`21.1.26),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21.1.29),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21.3.16)

○ 법 개정 이전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 ·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 · 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명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 ·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 · 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되어, 아이디어의 활용 ·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 · 제품뿐만 아니라 전자(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개정도 이루어졌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누리소통망(SNS) 등의 발달로 특정 상품이나 영업이 단기간에 유명성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 자동응답(ARS)1382, 정부24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위변조 확인 가능 -

(사례1)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비교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지 만져본다. 이후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하는지, 좌측 하단 작은 사진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지 기울여 보며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로 인해 폐업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사례2) 전세를 구하고 있던 ㄴ씨. 최근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을 접하고 걱정이 컸다. 그러나 전화(ARS1382)나, 정부24(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앱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다. 추가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상대방의 사진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즉석에서 확인하고 진위여부도 바로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

□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여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하였다.
-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었고,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 * 발급일자가 2019.12.31.인 경우 '20191231'로 입력
-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기(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 * 정부24 앱과,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내려받기 가능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 | Fax. 033-249-5274

Copyright(c)2022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

강원도의회 정책 Letter

VOL.83
2023.04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김 윤 승 , 전 성 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모색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화 및 확대

-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를 통해 의무화 되었으며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됨
- 제도 의무화 이후 2022년 현재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예산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음
  -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제도가 운영되고 잇으며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민참여 범위 및 예산 규모 확대, 지원조직 설치 등을 통해 참여예산제도는 확대·강화되는 추세임
-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문제 등 한계점이 존재함
  - 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제도의 질적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
  -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적·지속적 운영 및 광역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02. 6대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광역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 (예산규모 및 사업건수)지난 5년 간 6대 광역시 예산편성액과 반영건수는 다음과 같음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규모(예산 및 사업건수) 현황(2018 -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부산광역시	예산편성(억)	187	225	164	75	70
	예산반영 사업건수	30	26	112	154	126
인천광역시	예산편성(억)	14	199	297	401	485
	예산반영 사업건수	28	42	247	286	397
대구광역시	예산편성(억)	130	138	149	148	178
	예산반영 사업건수	325	378	443	298	562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억)	29.5	30	99	145	194
	예산반영 사업건수	35	41	135	216	336
광주광역시	예산편성(억)	66	75	72	68	59
	예산반영 사업건수	24	34	35	52	48
울산광역시	예산편성(억)	1,179	1,266	1,315	484	510
	예산반영 사업건수	61	81	55	82	55

- 2022년 6대 광역시 추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유형과 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및 위원회 운영 현황(2022) ●

		사업유형						위원회		
부산광역시	사업유형	계	시정 참여형	지역 참여형	시정 참여형	지역 참여형	-	위원회 (임기)	분과 위원회	운영 위원회
	예산액 (실링액)	170억	90억	40억	20억	20억	-	100명 (2년)	7개분과	16
인천광역시	사업유형	계	참여형	합치형	주민 자치회형	-	-	위원회 (임기)	분과 위원회	지원 위원회
	예산액 (실링액)	500억	240억	200억	60억		-	200명 (1년)	12개 분과	15명 이내 (2년)
대구광역시	사업유형	계	시정 참여형	청년 참여형	구군 참여형	읍면동 참여형	-	위원회 (임기)	분과 위원회	운영 위원회
	예산액 (실링액)	190억	90억	20억	40억	40억	-	100명 (1년)	6개 분과	14명
대전광역시	사업유형	계	시정 참여형	정책 숙의형	구정 참여형	주민 참여형	마을 계획형	위원회 (임기)	분과 위원회	운영 위원회
	예산액 (실링액)	200억	50억	60억	50억	24억	16억	110명 (2년)	7개분과	9명
울산광역시	사업유형	계	시정 참여형	정책 숙의형	구정 참여형	주민 참여형	마을 계획형	위원회 (임기)	분과 위원회	운영 위원회
	예산액 (실링액)	200억	50억	60억	50억	24억	16억	110명 (2년)	7개분과	9명
광주광역시	사업유형	계	시정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주민주도 공모사업 (1)	주민주도 공모사업 (2)	위원회 (임기)	분과 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액 (실링액)	125억	510억	32억	마을만들기 (4개소) 개소 당 1.55억	마을공통체 활성화 시비1억	90명 (2년)	6개분과	16명	

- (절차 및 지원조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및 운영 방식은 6대 광역시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조직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존재함

●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과정별 현황(2022) ●

분류	유형	월	내용	대구	인천	광주	부산	대전	울산
예산편성	준비단계	1월-2월	운영계획 수립·승인	Y	Y	Y	Y	Y	Y
	참여접수	3월-4월	공모사업 접수	Y	Y	Y	Y	Y	Y
	심의단계	4월-6월	사업타당성 검토	Y	Y	Y	Y	Y	Y
	심의단계	6월-8월	사업검사	Y	Y	Y	Y	Y	Y
	결정단계	8월	사업선정(총회개최)	Y	Y	Y	Y	Y	Y
	반영단계	9월-11월	선정사업 예산편성	Y	Y	Y	Y	Y	Y
	참여확대	3월-5월	사업계획서 컨설팅단 운영	Y	Y	Y	Y	Y	N
	참여확대	8월	참여예산편성 우선순위 설문	Y	Y	Y	Y	Y	N
	참여확대	9월-10	23년도 시전체 예산 방향 분과위원회 개최	Y	Y	Y	Y	Y	Y
예산집행	참여확대	7월, 11월	참여예산 진행 및 부정관련 모니터링 실시	Y	Y	Y	Y	Y	Y
	참여확대	상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Y	Y	Y	Y	Y	N
결산평가	참여확대	12월	참여예산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	Y	Y	Y	Y	Y	Y
	참여확대	11월	기초 참여예산제 평가	Y	Y	Y	Y	Y	Y
역량	참여확대	상시	예산학교운영	Y	Y	Y	Y	Y	Y
예산과정 지원	참여확대	상시	참여예산지원센터	N	Y	N	N	N	N
			참여예산지원협의회	Y	Y	Y	N	N	N
			주민참여예산연구회	N	N	N	N	Y	N
	참여확대	편성단계	참여예산 미선정된 사업 재선정위 운영	Y	N	N	N	N	N
			주민의견서 반영	Y	Y	Y	Y	Y	Y

03.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의 한계 및 문제점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모델(사업유형)에 따른 문제점

- 6대 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참여성과 실효성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참여성과 실효성 모두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광역시별로 참여예산 규모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주민협의형, 민관협치형의 주민참여예산 모델이 자리잡고 있으나 여전히 관주도적이며 주민주도형으로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실효성이 낮은 대표적인 이유로 주민 참여예산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전략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참여성과 관련하여서는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6대 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 유형은 참여형, 협치형, 지역참여형(주민자치회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형별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과정별 현황(2022) ●

사업유형	대상사업	한계
참여형	시정전반/ 시소관사무 (2개구 이상 공통사업)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일회성 성격 - 장기적 행정수요/지역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에 한계
협치형	협치단 발굴 정책사업 (청년, 여성 다문화 등)	시민(단체)과 사업부서 간의 공고한 거버넌스 체계 - 사업선정시 공정성, 투명성 이슈 발생
지역참여형	읍면동단위/생활밀착형 사업 (복지 등)	광역시와 기초단체 간 역할분담 불명확 - 참여예산사업의 중복문제 발생 주민자치회 주도의 사업선정 - 일부 주민 소외 문제, 사업선정 공정성 문제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절차상 한계

-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선정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 문제, 숙의 절차의 실효성, 주민참여 부족 문제 등이 주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과정별 현황(2022) ●

절차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사업제안 및 검토단계	• 사업의제 선정과정 및 사업제안서 관련 개선 필요성의 지속적 제기 - 일부 사업유형의 이제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발생 - 주민 사업제안서에 대한 보완절차 및 컨설팅 실효성 부족 - 일부 광역시의 사업 유형별 실링(예산지원액 한도)지정으로 인한 문제(차년도 예산삭감 방지를 위해 한도액까지 시급하지 않은 일회성·민원성 사업제안, 특정사업부서에서 일반예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모)
사업심사 및 선정단계	• 사업선정을 위한 숙의과정의 실효성 및 예산 반영 사업선정의 공정성 문제 - 선정과정에서의 형식적 심의, 심의과정부족(회의 횟수 부족, 숙의공간 부족 문제) → 숙의절차의 한계로 인해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발생 - 일부 광역시 협치형 사업선정에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사업선정 이후 예산반영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으로 공정성 문제 제기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 제도상 연임이 쉽지 않아 전문성 축적 어려움
사업진행 및 결산 단계	• 2018년 이후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제도화에도 불구 주민참여 부족 - 단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참여예산사업에서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모니터링에 대한 환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이 개진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반영되지 않는 경우 다수
지원조직	- 지원조직(참여예산지원협의회, 참여예산지원센터 등)의 역할 불분명 - 참여예산교육의 커리큘럼 부족 또는 내용부실 -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04.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의 개선 방향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모델 및 사업유형

- (모델-기본방향)시민참여 제안서 품질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숙의·공론 절차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함
  - 참여예산 제안의 실효성 제로를 통해 참여에 대한 주민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권한 부여 확대 필요(민관협치형 → 주민주도형)
-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사이 역할 분담 및 기초단체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중복 방지하여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광역시별로 운영 중인 사업유형과 운영상 한계점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과정별 현황(2022) •

사업유형	개선방안
참여형	• 사업제안에서 대한 컨설팅 확대 및 강화 • 부적격자 체킹 시스템 도입(예 : 대구 광역시)
협치형	• 사업발굴 및 선정방식 개선(선정과정에 일반시민 참여 확대, 정보공개 강화)
지역참여형	• 주민자치회를 활용하되 선정과정에 대한 공개 강화 • 광역과 기초단체 간 역할분담방식 체계화 및 정책실험의 장으로 활용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절차 개선방안

- 6대 광역시에서 조사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절차 운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과정별 현황(2022) •

사업유형	개선방안
사업제안 및 검토 단계	• 사업제안 및 심사를 위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숙의 절차 참여자 및 일반대중) • 빅데이터 활용 모색 및 대중에 데이터 분석결과 제공(제안사업 및 예산 편성 현황 등) • 예산한도(실링) 폐지 • 컨설팅 확대(전문가, 퇴직공무원 등 활용, 예산학교 등을 통한 제안서 제출 전 컨설팅 기회 제공 : 시흥시 사례)
사업심사 및 선정단계	• 심사 및 선정과정 공개(트래킹 시스템 제공) • 사업제안 내용에 대한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서울시 사례) • 숙의과정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위원회 회의 횟수 및 예산 증대) • 심의탈락 제안서에 대한 상세이유 제공/ 워킹그룹 활용을 통한 실현가능성 검토기회 제공(보완후 재공모) • 제안사업 간 또는 타 행정서비스와의 연계 모색 • 주민참여예산 등 전문성 강화방안 모색
사업진행 및 결산 단계	• 예산집행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강화(주민설명회, 주민 명예감독관, 주민제안 감리제) • 주민참여예산 관련 결산 검사에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 참여
지원조직	• 지원조직(참여예산지원협의회, 참여예산지원센터 등)의 역할 재설정 및 명확화 • 공무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교육기회 제공

출처 : 김윤승,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 | Fax. 033-249-5274
Copyright(c)2022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